



"진흥회 이사 조속히 추천하라" 야당 당사 몰려간 노동조합

6월 말 시한...야당이 추천 거부시 '6인체제 출범 강행' 정부에 요구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조합)는 6월 29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 몰려갔다. 제1 야당이 반년 넘도록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이사 추천을 미룬 탓에 벌어진 연합뉴스 경영진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인사를 진흥회 이사로 조속히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시한은 6월 말로 잡았다. 지난달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과 같다.

조합은 회견에서 "6월 말까지는 오늘을 포함해 이틀이 남았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공영언론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적절한 인사'를 '조속히' 진흥회 이사 후보로 추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절한 인사'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언론을 원하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인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적격자로 규정했다. 과거 연합뉴스에 몸담은 인사라 할지라도 공정보도 훼손 논란에 휘말렸거나, 노조를 탄압하고, 대기업과 자본권력에 영합했다는 의심을 받은 전력은 있는 인사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난 박노환 경영진 때 조복래 전 콘텐츠융합상무와 이상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일컫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공모한 진흥회 이사 자리에 지원한 바 있다.

조합은 국민의힘이 6월 말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야당 이사를 제외한 6인 이사 체제로 진흥회를 새로 출범시킬 것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조합은 "윤 원내대표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빈 말)이 되지 않도록 진흥회를 반드시 출범시켜 연합뉴스 경영 정상화의 물꼬를 띄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민 노조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버티겠다면, 그래서 야당 이사 없이 진흥회가 출범해 새 연합뉴스 경영진을 선출한다면, 그때 가서 탄소리 하지 말라"라며 "정상적 이사 추

천이라는 책임을 방기한 당신들에게는 그럴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합원 대표로 회견장에서 발언한 오정훈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6월 30일까지 진흥회 이사를 추천하고 법치와 상식이 통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청와대 탓만 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언론노조 윤창현 위원장과 전국신문·뉴스통신노동조합협의회 장형우 의장도 함께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6월 말까지 당신의 책무,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라",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 뭐가 새로운 것인지 빨리 보여주길 바란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은 회견을 마친 뒤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야당의 이사 후보 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청와대 앞에서 50일 넘게 진행 중인 1인 시위를 청와대가 진흥회 출범을 강행할 때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조합은 정치권이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하는 연합뉴스의 뒤틀린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진흥회가 출범할 경우 사장추천위원회 및 사장추천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사후 검열 웬 말인가, 진흥회는 정신 차려라" 진흥회 앞 '콘텐츠 사례연구' 경영평가 반대 침묵농성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1층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조합 집행부원들이 이곳에 입주한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사무국 앞에서 "언론장악 악용된다, 진흥회는 정신 차려라", "진흥회, 검열기구로 바뀌려 하나?" 등의 피켓을 들고서 침묵 농성을 벌인 것이다. 사장 선출 시기가 아닌데도 조합원들이 진흥회에 몰려간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은 진흥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합뉴스 경영평가의 일환으로 진행한 '콘텐츠 사례연구'를 경영평가 보고서에 포함할지를 결정하는 날이었다.

진흥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에 콘텐츠 사례연구를 포함하려 시도했다. 콘텐츠 사례연구는 몇 개의 주제를 정한 뒤 해당 주제를 다룬 1년 치 기사를 전수 분석해 편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진흥회 구조상 이사진이 여론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합뉴스의 구독료나 공적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 보전 협상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경영평가 보고서에 콘텐츠 사례연구 방식의 평가를 포함한다면, 편집권을 심대히 침해할 수 있을뿐더러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나 방향에 반하는 기사에 재

갈을 물리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콘텐츠 사례연구가 정치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입안의 허처럼 굴지 않는 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수단일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언론을 굴복시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이 제도는 선례로 작용해 노골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조합은 판단했다.

다른 공영언론사에서도 기사 하나하



나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곳은 없다.

이 때문에 조합은 진흥회의 시도를

1인 시위자들이 남긴 한마디



- 국가기간통신사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다.
- 연합뉴스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것.
- 연합뉴스의 목소리를 들어라.
- 좌고우면 말고 조속히 연합뉴스 정상화하라.
- 원래부터 큰 힘은 없습니다. 힘을 매일수록 서로 손을 맞잡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 정부와 야당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더 단단한 모습으로 연합뉴스를 지켜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 오랜만에 가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간절한 수많은 다른 외침들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결집된 힘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노조 화이팅~
- 지금 겪고 있는 언론에 대한 권력의 불합리한 행태가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공정정보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지배구조 개선은 연합뉴스와 한국 언론의 선결 과제입니다. 가까울 수도 있고, 먼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 전국 취재본부의 많은 조합원들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 야당 눈치를 왜 이럴때 보나. 리더십 공백 더는 방치말라.
- The Show Mustn't Go On.
- 결정적 한 방, 그런 것 없습니다. 잔편치라도 즐기차게.
- 비정상적 정상화, 여러분의 관심이 앞당깁니다.
-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현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 상황이 어렵지만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노조에도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 진흥회 출범 지연으로 공영언론인 연합뉴스가 하루하루 망가지고 있는데 조합원, 비조합원 가릴때가 아니다. 연합뉴스 구성원이라면 모두가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 과연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무기력해지기 쉽지만 이런 때일수록 사원 한명 한명의 의지를 모아나가면 좋겠습니다.
- 우직한 사람의 작은 발걸음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 보는 눈이 많을수록 결국 더 바른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와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무책임한 정치권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참담한 이번 사태를 연합뉴스가 단계 도약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 생각은 조금씩 달라도 회사 걱정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장 선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연합뉴스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 이루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벌써 이렇게 긴 시간 시위가 이어졌다고 하니 좀 씁쓸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조합원의 외침이 계속될 것이며, 결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 회사가 얼른 활기를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태 해결을 바라는 만큼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 끝이 아득해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성원 모두의 바람도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 전 국민이 바란다. 연합뉴스 정상화 요구에 정부는 조속히 응답 바란다.
- 땀별에 한시간 서있어보니 시원한 바람 한줄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속 시원한 답이 나오길 촉구합니다.
-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연합뉴스가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루빨리 연합뉴스의 리더십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오게 될줄은 몰랐다. 진흥회가 빨리,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구성됐으면 좋겠다.
- 독자 중심 공영언론 위상을 조속히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3년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도 논의되기를 바란다.
- 지치고 힘들어도 조속한 연합뉴스 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 현재 사태는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역으로 연합뉴스 지배구조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하자.
- 연합뉴스 화이팅!
- 정부는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연합뉴스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랍니다.

지배구조개선 특위 재가동 한 달... 7차례 회의 법 개정 방향,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안 마련

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지배구조개선특위)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그간 7차례 회의를 통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진흥법) 개정의 방향성과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의 사장 추천위원회 및 사장 추천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진흥법 개정 움직임은 2009년 4월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한 이래 2014년 2월 배재정 당시 민주당 의원이 여, 야 6명씩 동수 이사 추천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 이후 아예 없었다.

지배구조개선특위는 우선 연합뉴스 1대 주주이자 사장 추천권한을 지닌 진흥회 이사 구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수행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할 때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현 구조에 비춰볼 때 연합뉴스 사장을 뽑는 절차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연합뉴스 사장 선출과정에 이미 시민 참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현 경영진을 선출한 2018년 2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 60명과 연합뉴스 구성원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장 예비후보 5명이 나서서 공개정책설명회를 했다. 이들 100명은 설명회 청취 후 진흥회 이사진의 최종 면접에서 활용할 공통질문을 도출해 전달했다.

◇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 특위 구성의 의미

2003년 4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사장 추천위원회 관철을 위한 조합의 지배구조개선특위 활동은 2009년 4월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개정하는 시기까지 이어져 왔다.

2012년 박정찬 사장 연임 저지와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103일 총파업 시기에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흥법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파업 종료 이후 특위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올해 다시 구성된 지배구조개선특위는 사상 초유의 진흥회 출범 지연 사태 및 현 경영진 임기 종료 상황에서 재가동됐다.

정치권이 연합뉴스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지배구조개선특위 재출범의 가장 큰 이유였다. 여기에 연합뉴스를 비롯해 KBS, MBC, EBS 등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언론노조 및 시민사회 요구가 거세진 상황 또한 지배구조개선특위 재가동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유난히 공영언론사 이사 및 사장 교체가 많은 해이다.

진흥회 및 연합뉴스 경영진 선출뿐 아니라 8월부터는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경영진이 줄줄이 바뀐다. KBS 이사회(11명)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9명)가 8월에 교체되며, 이어 9월 EBS 이사회(9명) 교체, 12월 KBS 사장 교체 등이 예정돼 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공영언론사 이사 및 사장 선임에 정치권이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하면서 6월말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입법안 쟁취 투쟁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혁신특위를 구성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 통과를 공언하기도 했으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는 반면, 진흥법 개정안은 단 한건도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배구조개선특위는 조속한 진흥법 개정목표를 삼았으며, 개정안의 핵심 과제로 ▲ 진흥회 이사 구성 확대 및 정치권 영향력 최소화 ▲ 이사진 및 경영진의 자격 요건 강화 ▲ 사장추천위원회에 진흥회 이사 참여 배제 ▲ 사장 선출 과정에 국민참여 보장 등을 설정했다.

◇ 진흥법 개정 방향성...이사 구성 중립성 강화와 국민 참여

진흥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것이다. 현 진흥회 이사진은 정치권 후견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여론 편향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지배구조개선 특위의 진흥법 개정 방향은 ▲ 진

흥회 이사 추천에 정치권이 완전히 손을 떼는 방식 ▲ 이사회 내 중립지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사 수 확대 ▲ 현 추천제도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사장 선임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추위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으로 좁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이사 선임을 국민추천위원회 100여 명에게 맡긴다는 내용이다. 국민추천위원회의 선임과 운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는 2016년 촛불 광장에서 MBC 이용마 기자가 외친 “국민에게 공영언론을 돌려주자”는 절규를 반영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연합뉴스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주체와 방식이 모호하고 정치권이 호응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사회 내 중립지대 설정은 현행 7인 구조를 9인 이상으로 확대한 뒤 정치권 5명(정부 2인·국회의장 1인·여당 1인·야당 1인),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2명 중 정부 몫을 줄이고 현업 언론인 단체나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2명 이상을 더해 정부·여당이 물리적인 과반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업언론인 단체, 학계 또는 법조계 단체를 어떻게 지정할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뉴스통신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단체를 어떻게 지정할 것인가도 논란이 여전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흥법이 정한 추천권을 인정할 경우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장추천위원회에 진흥회 이사 3명이 직접 참여하는 옥상옥 구조를 탈피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진흥법 개정안 제출과 발의 그리고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대선을 전후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기에 진흥법 개정에 대한 토론과 법안 발의가 시급하다는 것이 지배구조개선특위의 판단이다.

☞ 1면에 이어

편집권 독립 침해, 사후검열 등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이 시도를 무산시킨 데 이어 올해도 강한 반대 의사를 전달해왔다.

하지만, 진흥회 일부 이사진들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시 이사회가 열리는 날 조합이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회의장 점거나 이사들의 회의장 진입 차단 등의 강경수단 대신 침묵 농성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

조합의 강한 반대 행동에 임시이사

회에 참석한 이사들 사이에서는 격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사 한 명은 회의 시작 30분여 만에 콘텐츠 사례연구 포함 시도에 반발해 퇴장하기도 했다.

결국 진흥회는 2시간 가까이 이사회를 진행한 결과 콘텐츠 사례연구 방식의 평가 결과를 올해 경영평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진이 바뀐 6기 진흥회가 출범하더라도 연합뉴스 보도를 간섭하려는 시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향후에도 총력을 다해 저지할 방침이다.

<알림> 2021 도쿄올림픽 취재단 지원금 전달

노동조합 집행부는 2021 도쿄 올림픽 취재단에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만원은 일본 내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보존식 등 준비할 물품이 대폭 늘어난 것을 고려해 책정한 금액입니다.



"진흥회 이사들, 사추위 직접 참여 말라...시민 평가 보장돼야" 조합, 사장추천제도 개선 제안 구체화..."차기 진흥회에 전달 예정"

조합이 뉴스통신진흥회(진흥회) 차기 이사진에 제 안할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및 사장추천제도 개 선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지배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은 진흥법 개정이 지 만, 차기 진흥회 출범 시기가 진흥법 개정보다 더 일찍 도래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현 진흥법 테두 리 안에서 사추위와 사장추천제도 개선에 관한 조합 의 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 산하 독립기구인 지배구조개선특위가 6월 1 일부터 28일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도출한 개 선안은 다음과 같다.

이는 지난 4월 12~14일 전 조합원 설문을 거쳐 조 합 집행부가 확정된 '사장 추천 절차와 지배구조 개 선을 위한 3대 제안'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조합은 이번 개선안을 노보에서 공개한 뒤 사내게 시판을 통해 비조합원을 포함한 사원들의 의견을 수 렴할 예정이며, 대의원대회 추인을 통해 확정할 계 획이다. 이후에는 새로 구성된 진흥회 이사들을 상 대로 조합의 개선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에 주 력할 방침이다.

현 조정부 사장이 선임된 2018년 사장 선출 당시 구성된 사추위는 진흥회 이사 3명과 조합이 추천하 는 외부인사 1명, 진흥회와 조합이 협의해 추천한 외 부인사 1명까지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사추위원의 과반이 진흥회 이사인데다 진흥회 이 사회는 사추위가 걸러낸 2~3명의 예비후보를 심사 해 최종 1인을 선출할 권한을 지니고 있어 사추위는 '옥상옥' 지적을 받아왔다.

최종 결정권을 지닌 이사가 사추위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는 경우도 사추위를 운영하는 국내 공공 기관에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이에 지배구조개선특위는 진흥회 이사가 사추위 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사 추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추위 정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안을 마 련했다. 예컨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림으로써 사추위내 진흥회 지분을 낮추고, 언론 현업단체 등 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들을 합류시켜 중립성과 독립 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배구조특위의 판 단이다.

개선안의 특징을 요약하면 진흥회 이사가 사추위 에 직접 참여하는 '옥상옥' 구조를 탈피하면서 정치 권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연합뉴스 사 장은 청와대가 점지한 사람이 된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을 그만하자는 숙원이 반영된 것이다.

◇ 시민 참여단을 평가단으로 격상해야

시민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연 합뉴스 사장 선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지난 2018년 사장추천 절차는 1차 서류심사를 통 과한 5명의 1차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공개정책설명 회를 열어 2차 예비후보 3명을 골라낸 뒤 진흥회 이 사회가 최종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공개정책설명회를 지켜본 시민들은 단순한 '방청객'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에 올해 사장 추 천 과정에서는 후보들에게 직접 점수를 매기는 적극 적인 역할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 지배구조개선특 위 의 입장이다.

지배구조개선특위는 공개정책설명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2차 심사에서 시민평가단에 평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평가 권한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는 향후 진흥회와의 협상 과정에 달 려 있지만, 일단 2018년 사장 선출 당시 시민평가단 에 40%의 평가 권한을 부여한 KBS 사례를 참고하 기로 했다.

일부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지배구조개선특위 회의에서는 2차 심사에서 2차 예비후보 3명을 골라내는 기존 방식대로라면 사장 후보에 대한 평가 권한을 부여한다 해도 시민평가단 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 서 2차 심사에서 5명 가운데 2명을 골라내거나, 7명 가운데 3명을 골라내는 등의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지배구조개선특위는 사내 여론수렴 과정과 추가 논의를 거쳐 해당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할 방 침이다.

사장추천제도 개선 FAQ

1. 사장추천 과정에서 시민평가단의 역할을 확대했 을 때 특정 정치성향 집단 등이 과대표집되는 등의 상 황이 발생해 시민의 목소리가 왜곡될 소지는 없는가?

- 공신력 있는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성별, 연령, 거 주권역 등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시민 평가단을 구성한다면 표집에 실패해 시민의 목소리 가 왜곡될 위험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합니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정파 집단이 각종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과를 왜곡하려 한다는 의혹이 최근 들어 SNS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이런 시도 가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확인된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2. 시민평가단이 과연 연합뉴스 사장 후보들의 역량 을 평가하기에 연합뉴스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 족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2018년 사장선출 과정에서 시민자문단을 운영했 던 KBS 당국자들도 KBS의 역할과 성격을 제대로 이 해하는 시민들이 극히 적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KBS는 중립적 외부기관 소속의 퍼실리테이 터(Facilitator·정성조사진행자)를 활용해 시민자문 단원들의 KB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지배구조특위 역시 연합뉴스 사장 추천 과정에 비스 한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 도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시민평가단은 자칫 언론 현업자나 유관단체 관계자들의 관점에 매몰되기 쉬운 사장 후보 평가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회사가 망가지는 상황에 서 시민참여를 도입하겠다고 더 시간을 끌 이유가 있 는가? 회사의 신속한 정상화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 공신력 있는 모 여론조사전문기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기관은 시민참여제도 도입시 사장 선출까지 총 8 주(56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시민참관단만 운영했던 2018년 사장 선출 의 경우 진흥회 이사 선임에서 사장 선출까지 약 50일 이 소요됐습니다.

다만, 전임 사장의 임기에 여유가 있었던 당시와 현 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하면 사 장 추천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배구조특위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제대로 된 후보를 사장으로 선 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① 사장 공모시 응모자격 및 결격사유 개선안

▲ 응모자격 추가

- 공정보도와 편집권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원칙이 있는 자
- 언론노동자에 대한 이해와 노동권 존중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자

▲ 결격사유 추가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 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하거나 인수위원회 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난 날부터 5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② 사추위 구성 개선안

- 진흥회 이사 3인이 직접 참여하는 현행 방식 배제
- 사추위원 정수 확대를 통한 진흥회 과반 체제 탈피

③ 시민 참여 개선안

- 2018년에 시행한 시민 참여단을 '평가단'으로 격상 시켜 사추위원처럼 평가 권한을 부여
- 평가 권한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지는 2018년 KBS 사장 선출 사례(당시 시민 평가단에 40%의 평가 권 한을 부여했음)를 참고하되, 진흥회와 협상을 거쳐 최 종 확정

◇ '옥상옥'은 이제 그만...사장추천, 시민이 중심 돼야

진흥회는 전통적으로 사추위를 구성해 연합뉴스 사장 후보 추천 업무를 주관하도록 해 왔다.